이명박 후보 당사 기습 방문 왜

기업인 출신 혁신 면모 본격적 당 내부 다잡기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11일 아침 여의도 당사를 예고 없이 방문, 선대위 발족 이후 본격적인 당 내부 다잡기에 나섰다.

이날 기습 방문은 기업인 출신으로서 이 후보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당직자들에 나태한 태도를 없애고 긴장감을 불어넣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조찬 일정을 마치고 예고 없이 오전 8시께 당사에 도착한 이 후보는 이날 4층 기자실을 시작으로 당무조정국과 조직국, 총무국 등이 위치한 3층을 돌며 당직자들을 격려했다.

이 후보의 이날 방문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탓에 사무실은 다소 한산했고, 일부 직원들은 상당히 놀란 표정이었다. 이 후보는 특히 '발대식에서 후보가 진행자가 됐다', '어제 행사가 신선했다'는 등 발언이 이어지자 "(우리가) 바뀐 모습을 보이면 느낌을 받는다"면서 "이렇게 해서 변화를 빠르게 해야한다.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서 변화, 변화 떠들어도 소용이 없다"며 내부로부터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또 '과거 같으면 정권을 규탄하는 자리였을 것'이라는 지적엔 "우리가 잘 하면 된다. 남 욕하는 건...우리가 잘하는 모습만 보이면 된다"면서 "오히려 저쪽이 우리를 공격한다. 오늘쯤 어제 우리가 한 것 갖고 성명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 발대식도 될 수 있으면 단순하게 하고, 참여하고 싶은 만큼만 오게하라. 동원하고 그러면 안되고, 방이 없으면 마당에서 하면 된다"면서 "나는 어제도 행사를 저녁에 했으면 좋겠다 했다. 지방 행사들도 될 수 있으면 오후 늦게 4시나 5시쯤 했으면 좋겠다"고 구체적으로 당부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교육 문제와 관련해선 "세계에 사교육비를 그렇게 많이 들이는 나라가 없다"며 "부모들의 교육열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자꾸 사교육비가 더 드는데 두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총무국에 들러 "(선대위) 외부에서 온 사람에게 신경 써달라. 같이 일하자고 하고 장소도 안 준다고 하면 안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서울 구기동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남한 5천만, 북한 2천만 국민 누구나 평화를 원하지, 전쟁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며 "남북 문제에 있어서 누가 평화세력이고, 전쟁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정치공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형준 대변인과 박성범 박진 주호영 김애실 의원을 비롯해 오영찬 이북5도민회 중앙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李, 방미 접고 러·중 방문 재추진

부시 대통령 면담 불발 '한계 노출' 논란속 '4강 외교' 조용한 행보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가 '4강(强) 외교'를 조심스럽게 재추진하고 있다.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 불발로 '외교력 한계' 노출 논란 등 적잖은 타격을 입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유종하 전 외무장관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외교안보 라인을 보강한 만큼 러시아와 중국 방문을 일단 예정대로 추진키로 한 것.

한 측근은 11일 "이 후보가 대선 전에 4강 중 한 두 국가를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다"면서 "그러나 구체적인 방문국가 및 시점 등에 대해서는 뭐라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일단 미국 방문 계획은 접고 러시아와 중국, 그 중에서도 러시아 방문을 최우선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달 추석 연휴 기간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려 했으나 러시아 내부의 복잡한 사정 등으로 일정을 연기한 바 있다.

러시아를 방문할 경우 준비기간 등을 감안하면 내달 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측근들은 전했다. 러시아 방문은 현재 선대위 외교안보 라인에서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선대위 내부에선 이 후보의 해외 방문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도 흘러 나오고 있다. 지방선대위 발족식 참석, 타운 미팅 등 국내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무리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는 것.

선대위 핵심 관계자는 "내달 중순 이전에 지방선대위를 순차적으로 발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후보가 며칠씩 자리를 비우고 외국에 나가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섣불리 4강 외교에 나섰다가 스타일을 구긴 경험이 있는 만큼 완벽한 준비를 하지 않고는 쉽게 외교무대에 너서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있다. 또 자칫 4강외교 추진이 사대주의적 발상이라는 역풍을 부를 수 있어 완벽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캠프 내에서 제기되고 잇다. 실제로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이 무산된 뒤 친미주의자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연합뉴스

한나라당 대선 광주·전남 선대위 발대 한나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은 11일 오후 광주시 북구 중흥동 당사에서 17대 대선 광주선대위와 전남선대위 발대식을 갖고 대선 필승을 다짐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한, '불법조사' 특검법안 제출

한나라당은 11일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권력기관의 '불법조사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이날 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불법 조사) 배후에 집권세력이 개입했는지에 대한 검찰 수사를 의뢰했지만 수 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실체 규명이 안 되고 있다"며 "검찰 수사로는 의혹 해소가 불가능해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각되자 (권력기관이)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불법조사를 벌이고, 건교부는 이 후보 대운하 공약에 대해 부정적 평가를 목적으로 왜곡·조작된 보고서를 청와대에 보고하는 등 집권세력이 이 후보 죽이기에 개입된 게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사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수사 기간을 1차 50일, 2차 30일 등 합계 80일로 하는 특검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은 국정원, 국세청, 건교부, 여권 의원 등 권력기관과 집권세력의 한나라당 이 후보와 친인척에 대한 불법조사 및 한반도대운하 공약 등을 정치공작 차원으로 음해한 권력개입 의혹사건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한 최고위원 김학원·전재희 사실상 확정

한나라당 강창희, 전여옥 전 최고위원의 사퇴로 공석인 선출직 최고위원 두 자리에 3선의 김학원 의원과 재선의 전재희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최고위원 보선 출마 의사를 밝혔던 김무성 의원(3선)이 11일 충청권 배려라는 '대의'를 위해 출마 의사를 철회함으로써 경선이 불필요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김무성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전 대표가 경선에서 자신을 도왔던 두 사람이 대결하는 모습이 너무 안 좋은 만큼 캠프 좌장 역할을 했던 나에게 양보를 부탁했다"면서 "대선을 앞두고 당에서 충청권에 대한 배려가 꼭 있어야 한다는 박 전 대표의 언급도 고려했다"고 양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여성 몫으로 전재희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이 후보측과는 달리 내부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친박(친 박근혜)인 김무성, 김학원 의원간 예상됐던 표 대결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한나라당은 이에 따라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전국위원회에서 김학원, 전재희 의원 두 명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부여·청양이 지역구인 김학원 의원은 자민련 출신으로 한나라당 전국위원회 의장 겸 전당대회 의장을 역임했다.

경기 광명을이 지역구인 전재희 의원은 여성 최초의 행정고시 합격자 출신으로 지난 95년에는 여성 최초의 민선 시장 선출 기록을 갖고 있으며 당 정책위의장을 지냈다.

/연합뉴스

현장과 시각

대선 포기 총선 올인?

임동욱
서울취재 팀장

온갖 우여곡절을 거듭한 범여권의 국민경선이 다음주 마감될 예정인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력 부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정치적 격변기에 호남 민심을 대변하고 견인해야 할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한계를 드러내면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무기력은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개혁세력 결집의 원동력 역할을 하며 시대적 흐름의 방향을 제시했던 호남 민심의 침묵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다.

개탄할 일은 1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한나라당 초강세 국면 속에 광주·전남지역 일부 국회의원들은 대선보다는 차기 총선을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모 의원은 겉으로는 경선 중립을 선언하고 물밑으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이중 행보로 논란을 빚었으며 또 다른 의원은 경선 과정에서 복수의 후보에게 양다리를 걸쳤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은 당내 경선과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지역구 방문 횟수를 대폭 늘리는 한편 보좌진을 지역구에 상주시키며 내년 총선을 대비한 지역 조직 다지기에 몰두, '잿밥'에만 신경 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같은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무기력은 리더십 부재 등 개인적 역량 부족도 원인이 있지만 민주당 분당과 열린우리당 해체 등의 과정에서 쌓인 분열과 반목으로 상호 신뢰구조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상호 신뢰구조가 없는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적 격변기에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호남 민심의 대변 및 견인에 실패, 중앙 정치무대에서의 목소리가 축소되고 이는 호남 민심 결집에 악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범여권 경선 이후 이뤄질 후보단일화 과정에서라도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겸허하게 호남 민심을 이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대선 막판까지 정치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선 이후 치러질 총선에서 호남 민심의 엄중한 책임 추궁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를 반영하듯 벌써부터 지역 일각에서는 차기 총선에서의 물갈이를 거론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정치력 역량 부재라는 오명을 벗어나 막판 대선 정국에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 정치적 활로를 모색할 것인지 주목되고 있다.

/tuim@kwangju.co.kr